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11. 18.(화) 14: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5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2014-54-19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11월 13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하였으며, 일별 구체적인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704.43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심사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의견 중에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재방비율이 높아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의 편성비율, 재방비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술과 관련된 인력장비 등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투자

저조, 연구개발 인력 부족, 연구소 미설립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실현가능성 측면입니다. 재승인 신청서에서 제시한 경영전략 등 향후 사업계획은 최초 사업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과거 광고매출 실적에 비해 방송수입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승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재승인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재승인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방송광고 판매시장과 관련해서는 광고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한 광고매출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사안 발생 시에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되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승인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3월의 재승인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붙임 1>과 같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고 권고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승인장을 곧바로 교부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재승인 백서를 발행하는 한편 상반기 이후에 재승인 조건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2>와 <붙임 3>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붙임 1>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 1>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재승인 조건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 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위원 정책 건의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재승인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 국장님께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붙임 1>에 있는 재승인 조건 두 번째를 보면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의결하면 상반기에 했던 3개 종편을 비롯해서 4개의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모두 완료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재승인 받은 종편3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들 종편 3사 재승인 조건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조건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방송전문가들로 해서 외부 점검자문반을 만들어서 회의를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매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이지요. 지금 상반기에 재승인한 종편 3사 것은 받으신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받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30일까지 받으신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벌써 8, 9, 10월 그리고 11월이지 않습니까? 거의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실적을 점검·평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실 생각입니까? 혹시라도 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9월 말에 회의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국감 때문에 조금 지체되어서 10월 말에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제1차 회의 때 외부전문가 자문반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에 언제쯤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12월 초쯤에 보고가 가능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투자계획이나 방송 편성비율은 연단위로 실적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확보의 경우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으나 점검하는 것이 자칫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이행실적을 점검하라는 것이 정책건의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고 판단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여기에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보도프로그램이 많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도·시사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MBN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타 종편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종편이 지금 방송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 그대로 다양한 장르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방송법 제2조 제18호를 보면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MBN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있었던 3개 종편에 대한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종편 1개사를 제외하면 2개사에 대해서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편들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종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종편을 보십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답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도나 시사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지나서 이것을 평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측면은 일단 사업계획서에 방송사가 제시한 자기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 회의 때 한 번 논의가 됐습니다만 종편이 제기한 2012년 사업계획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항소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

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향소를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을 보면, 저희가 종편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이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관리감독 권한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에 대한 감독 및 사업계획서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이 지나 실적을 점검하고 제재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편 역시 방송사업자이고 언론이기에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편 4사의 재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저는 종편PP의 방송실태, 그리고 종합편성PP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위원회에서 한 번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 나온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시사 포함해서 보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그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의 경우에는 '15년도에 34.9%를 하고, '16년도에 34.8%, '17년도에 33.1%, '18년도에 32%, '19년도에 31%, 이 정도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부분은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이행강제수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릴 때 말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여기 <붙임 1>의 재승인 조건을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 이후에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제너럴(general)하게 이행을 잘하고 준수해라, 그리고 점검을 하고 변경할 때는 승인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행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에 대해 뭔가 조건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승인조건 <1>번과 그 밑에 각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

니까? 어떤 경우는 또 다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조건을 붙이고 아닌 것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첫 번째 것은 총괄적으로,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그중에서 우리가 재승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 또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 부분에 대한 자율성이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과연 심사하는 과정상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그 부분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방송사가 제시한 장르별 비율을 넘겼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제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승인하는 상황에서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아니면 명시적으로 '그것을 더 내려라'라고까지 조건 부과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내려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이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론으로 몇 개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을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보도·시사의 비율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쭙 본 것이었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번에 저희들이 재승인 조건이 아닌 권고사항에 대해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2개를 붙였습니다.

다. 하나는 위원회의 운영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는 조건과 조선방송은 그때 제출한 보도비율 편성 범위가 47%에서 38%까지 계속 낮춰 간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낸 적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것이고, 지금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34.9% 등등 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다음 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은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위반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심사위원 의견에 보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서 이러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어떤 경우에는 조건으로 넣고, 어떤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넣고, 어떤 경우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대략 이렇게 세 그룹으로 정리하신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조건 <1>번이 효력상 다 망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강조를 더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인조건을 개별 항목으로 이렇게 넣지 않아도 저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상 포함된 내용은 당연히 조건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사위원들 의견 중에 주요한 의견으로 그 부분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조건이나 권고사항에는 별도 아이টে็ม으로 안 나왔기에 물어봤었던 것입니다. 제 의견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에 시청자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청자 의견청취를 해서 13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지난번 3개 종편사 경우의 시청자 의견과 비교해서 특이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 프로그램 중에서 '천기누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힐링 프로그램 자체가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청층이 다양하지 못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도 부분에서는 균형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심사위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의견을 우리가 널리 청취해야 하는 마당에, 그 중에서 약간 선의가 아니게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귀담아야 할 의견들은 우리가 유념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조건으로 넣기 위해, 앞으로 시청자 의견은 주요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심사평가 결과 과락된 것이 없기는 한데, 이 중에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59%, 심사사항별로는 그것이 제일 낮은데,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이 같이 콤바인(combine)이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능력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전망치 자체에 대해서, MBN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청률이나 광고판매율에 대한 추정치 근거 자체가 여러 경영이나 회계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따른 재무제표 자체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일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차원이 고려되지 않았나 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먼저 재승인 받은 종편 3사의 심사결과 점수와 이번에 매일방송의 점수 간에 연관성, 연계성 내지는 비교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이 종편 4사를 우리가 재승인 심사했는데 3개사는 먼저 했고 매일방송은 이번에 하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들 심사결과 점수가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받은 점수가 앞에 받은 3개사 점수와 비교해서 높다, 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봤을 경우에는 결국 과거의 실적치와 계획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물론 평가의 기준 부분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평가를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는 일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난 3월에 700점을 월등히 넘은 사업자가 하나 있었고, 700점 바로 밑에 있는 범주에 2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0점을 조금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점수 분포도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큰 상대적인 평가는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디가 낫다, 못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끝으로 5페이지에 보면 정책 건의사항 중에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필요'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미디어법에 보면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위반여부를 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게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을 또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설명 드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심사위원들이 설명하면서 일단 지금 광고시장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공격적인 광고를 유치하려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그런 불공정하거나 편법적인 행위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정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제도의 개선 보완, 새로운 정책 수립 이렇게 하는 부분과 현 제도 내에서 저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할 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정책 방안 마련, 제가 보기에는 그 앞의 내용을 쪽 읽어보면 저희가 현재 제도를 활용해서 필요하면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건의사항이니까 저희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하고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심사의 기본계획과 배점표 시스템은 똑같지만 심사위원들은 다 다른 분들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심사위원장은 같은 분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심사위원들은 전체 교체, 다른 분들이고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심사위원에 따라 점수가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3개 종편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송 규제 정책을 펴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수단이 재허가, 재승인 심사와 그다음에 제3기 방통위 출범할 때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사업계획서와 재허가, 재승인 때 조건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일 많이 거론된 것이 종편의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지요. 3월에 심사받은 종편 3사의 보도·시사 편성비율과 오늘 MBN의 보도·시사 편성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번에 몇 퍼센트지요? 33%, 34%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은 향후 5년간 36%에서 31% 정도의 보도비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47%에서 38%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JTBC는 22%에서 24%, 그리고 채널A는 38%에서 28%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JTBC가 월등히 편성비율이 낮는데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면 종편 1개사만 빼고 나머지 3개사 전부 다 보도·시사 편성비율이 아주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편 전반에 대해 우리가 중간점검할 때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도·시사의 편성비율이 어느 정도 선이어야 합리적이고 방송법상 또는 우리 정책상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잘 아시다시피 장르별 편성의 비율에 대한 기준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오락 부문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도의 변화 추이를 봤을 경우에 정부가 보도·교양·오락을 3분의 1씩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정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열다섯 분의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반영해서 평가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시로 규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법상은 프로그램의 범주를 보도·교양·오락 크게 3개로 나누고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정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을 50% 못 넘게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오락의 비중이 보도·교양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는 오락프로 중에서 매일 주요뉴스 뒤에 따라 붙이는 스포츠를 따로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4대 범주로 나누어서 봤을 때 보도·교양·스포츠, 나머지 오락 이렇게 나누면 상식적으로 4분의 1을 보도프로그램이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에서 방통위가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매번 심사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도비율이 아주 높다,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지금 중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간점검할 때 정책수단, 고시를 확실하게 거기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편이든 간에 종합편성에 맞게 하는데 기준은 객관적으로 4분의 1, 25%를 넘어서면 이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45%, 47% 간다면 이것은 종편이 아니지요. 돈을 적게 들이고 콘텐츠 개발 투자 안 하고 매우 싼 가격으로 보도·시사 언론 기능만 하면서 더군다나 공정성 시비를 많이 받는다면 이것은 종편이 아닙니다. 종편 정책에 대해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허가 또는 재허가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강조하고, 이다음 우리 티타임에 반드시 규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보편적인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사평가 결과를 보니까 MBN <1>, <2>, <3>, <4>부터 <9>까지 항목 중 아까 재정 및 기술능력이 백분율로 봤을 때 59% 59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다음에 하위점수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재정능력은 경영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방송의 공적채무·공정성·공익성은 우리의 정책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의견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중요하게 지적하고 중간점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유념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 중에 보도비율을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형식으로 고시 등으로 정하는 방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상위법으로 해서 시행령 정도로 정해야 할 것인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보도만 정할 것인지 다른 부분도 정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과연 그와 같이 종합편성의 경우에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방송제작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사무국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또 위원회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앞서 종합적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종합편성PP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희 위원회가 종합편성PP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책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초 사업자 선정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데….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미디어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다양성을 제고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든가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도 좀 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방송사업자의 경쟁력과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그 경쟁력도 단순히 국내에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고,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였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봤을 경우 3년이 지나서 이번에 우리가 재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기 3년 동안은 준비하고 셋업(set up) 하는 기간인데 잘 아시다시피 당초 4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현실과 많이 괴리되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목표를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제 제2기 종편 재승인으로 들어

간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실질적인 도입의 목표가 어느 정도 하나씩 하나씩 구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은 승인조건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솔직히 위원회 종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몇 가지 주요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방송사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편성비율이나 장르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부터 정책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편이라고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면 그 장르별 비율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최소한 4개사에 대해 지난 3년의 실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3년에 대해서 계획을 점검해서 재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종편PP의 방송실태, 그리고 위원회 종편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린다고 했지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종편PP 방송실태와 종편PP 정책 전반에 대해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정책목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설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논의구조나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시지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에 대해서 오늘 MBN이 종편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입한지 3년차 됐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처음에 종편 도입정책을 폈는데 그 정체성에 맞게 하고 있는지, 중간점검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마당에 근본적인 정책점검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편 4사에 대한 방송평가 같은 전반적인 점검작업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간점검도 하고 또 앞으로 2~3년 뒤에 재승인 심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종편이 처음 출범했을 때 내걸었던 목표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는지,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등과 관련해서 종편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게 방송하고 있는지를 한 번 논의해 보고 점검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사에 대해 재승인 과정에서 과거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실태도 들여다보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3년에 대한 사업계획도 리뷰를 심사과정을 통해 하고 있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와 전혀 별도로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느냐? 저는 앞부분 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때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헤비(heavy)하게 가져가기보다는 4개사에 대한 재승인 절차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파악한 실태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방법론상의 대안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고시로 정한다고 해서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시를 한다, 안 한다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일 뿐이고 종편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제를 방통위가 사전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통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재승인 과정을 거쳐 사업자들이 내가 이렇게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인용해서 조건으로 하는 것과 사전적으로 편성비율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시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종편에 대한 편성비율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가 종합편성이라고 하면 지금 지상파도 종합편성에 들어가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방송법상에 종합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라고 하면 여기에는 지상파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종편이라고 하면 지상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편성PP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상의 종합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지상파와 PP 간에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래서 방송법상 보면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프로그램 편성에 관해서 딱 하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종합편성PP의 경우에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딱 그것 한 가지 규제조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것이 보도·오락·교양·스포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편성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나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상파와 종편 간의 차이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환경 자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종합편성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MBN의 정책 건의사항 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부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보도위원회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언급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5페이지 제일 밑에 '아울러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마치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부분의 차원은 아니고,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였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혹시 잘못 자칫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이 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닙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PP의 성격, 정체성을 규정한 근거가 무엇이지요? 방송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종편을 도입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법으로....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아마도 종편 성격 규정을 종합편성답게 다양하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는 명시적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지 않았지만 다양하고 균형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져 보고 그 종편의 법적 성격에 근거해서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 논외로 치고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들려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으로 보면 법에서 위임을 해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면 고시로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고, 그런 애매한 경우 시행령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되므로 사회적인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컨센서스는 종편 심사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방송계 또는 법조인도 있지만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종편은 종편답지 않게 보도·시사 비율이 아주 높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저는 사회적 컨센서스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번 회의 때마다 문제가 있다고 말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종편의 성격,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규제하는, 제한하는 고시나 시행령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것을 아까 상식적으로 방송법에 규정된 보도·교양·오락 3개인데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MBN 34~35% 되는 것도 과도한 보도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만으로 봐도 3개 범주로 분류했다면 33%인데 오락은 50%를 넘지 말라는 것은 오락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4개의 범주로 나누면 보도는 역시 4분의 1이다, 그렇게 해서 매번 지적을 받는 보도편성 비율만이라도 고시나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방송법 제6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오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과 같은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그런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러면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은 이 정도 논의하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방송법 제69조제3항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시행령에 어떤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두게 되면 어느 범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연구해서 한 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적인 정책, 그다음에 실제로 종편이 어떤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는지 그 실태, 그것이 과연 우리 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은 그것 역시 저희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보면 사실은 저희의 정책목표와 부합되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매년 또는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전반적인 것까지 다 살펴볼 것인지,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 방송편성의 독립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도 역시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차분하게 논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부분들은 아마도 향후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들을 다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또 더 나아가서 의결주문에 대해 혹시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의결주문이나 재승인 조건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4-54-17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및 문구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분쟁해결 제도 및 재산상황공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년 11월~'12년 1월에 여러 차례 방송중단이 있었습니다. 지상파 쪽에서 프로그램 채널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라든가 유료방송 쪽에서 송출을 중단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12년 2월에 그 당시 제2기 방통위에서 의무재전송 범위 확대를 논의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직권조정 제도 도입 등 '방송분쟁해결절차 보완(안)'을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그 내용을 담은 방송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에 금년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완료 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방송분쟁해결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직권조정 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이유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이 우려될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해결을 통해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권조정 제도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도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안)는 지난 '13년 9월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방송 중단으로 인해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조정 대상은 제76조제2항의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무재전송 채널 이외의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권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방통위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규개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직권조정 대상은 원안을 유지하되 규개위원고에 따라 직권재정회부 권한을 삭제하고 기존 법령에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조정 주체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조정개시 주체가 방통위인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인지가 불명확했으나 분쟁전담기구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완결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법령 수준에 맞추어 조정절차 등을 상향입법하였습니다. 상향입법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정제도 신설입니다. 재정제도 도입의 이유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쟁에 대해 방통위가 전문규제기관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년 9월 입법예고(안)에는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재정 대상은 조정 대상과 동일하

계 방송프로그램 및 IPTV 콘텐츠의 공급·수급 관련 분쟁, 방송 송출용 전기통신설비 사용 관련 분쟁, 방송사업 구역 관련 분쟁,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 관련 분쟁, 방송사업자 또는 IPTV 사업자 간 공동사업 관련 분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재정을 하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진행 중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정절차는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효력은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해당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에 수정안을, 재정이 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사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 시청권이나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쟁에 한해 재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당사자에 대한 절차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재정의 대상을 방송프로그램 등의 공급·수급 관련 분쟁 중 시청자 이익저해 우려가 있는 분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방송송출용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관련 분쟁으로 한정하고, 반면에 방송사업구역 관련 분쟁,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 관련 분쟁과 방송사업자·IPTV 사업자 간 공동사업 관련 분쟁은 제외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한 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지상파방송채널의 재송신,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수급, IPTV용 콘텐츠 공급·수급, SO·PP간 채널 거래 등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정 대상의 수정(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측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합의권고 절차를 신설하고 시청자 이익이나 방송시장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분쟁은 재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효력은 규제위 권고를 반영하여 재정의 효력발생 요건을 소송이 30일 내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서 60일 내 제기하지 않는 경우로 완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 유지·재개 명령 도입입니다. 개정이유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방송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안은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중단 우려가 있어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방통위는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명령 불이행 시 방송사업자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후 수정안은 동 명령권을 도입하되 영업의 자유 제한 등 침익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중단이 임박한 경우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산상황공표제도 개선입니다. 개정이유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대상에 IPTV 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어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상황 자료 작성 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IPTV 사업자의 재산상황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자료 작성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문을 이동하는 건입니다. 재송신 관련 조항(법 제78조)에 규정하고 있는 편성과 관련된 사항을 방송법 편성에 부합하도록 제69조 쪽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다른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편성 제한 규정을 재송신 조항에서 편성 조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처리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체처 심사를 거친 이후 연내에 국무회의를 의결하여 정부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실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4건의 방송중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지상파방송이 HD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SO가 송출을 중단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방송사가 공급을 중단한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지상파방송사가 공급을 중단한 것이고, 뒤에는 SO가 송출을 중단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부분에서 보면 피해 시청자 수가 뒷부분 2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HD 가입자에 한해서 공급을 중단했고, SD급에 대해서는 공급을 계속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번째, SO들이 송출을 중단한 사례의 경우 일단 SO들이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게 된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SO가 임의로 중단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임의로 했던 것이지요?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 이기주 상임위원

- 임의로 했다는데 임의로 아니면 어떻게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법원에서 한다면 이런 것이 아니고 SO가...

○ 최성준 위원장

- '임의'라는 표현이 조금 묘한데 이때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이에 재송신료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재송신료 분쟁이 있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분쟁이 있었습니다. 재송신료 분쟁이 있다가 타결이 안 된 중에….

○ **최성준 위원장**

- 재송신료 분쟁이 있다가 타결이 되지 않아서 SO가 송출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본적으로 지상파방송사가 위성방송에게 하듯이 SO에게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다른 것은 다 그동안에 많이 논의되어서 직권조정제도나 방송 유지·재개 명령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제도 문제입니다.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밝혔듯이 방송 규제정책으로 새로운 재정제도를 최소한의 대상으로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나 하면 총론적으로 역시 지상파방송사들이 아직도 영향력이 강합니다. 힘이 세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지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국회가 여야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해도 지상파방송사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 언론계, 정계 또 일반 국민 여론층은 '지상파방송사가 지금도 꽤 힘이 세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기본정책 방송규제기구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제대로 먹히는지, 반영되는지, 소화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정책규제의 끈, 그 장치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안을 보면 처음에 제가 동의했던 국민 관심사로 보편적 시청권 침해가 우려된 압박한 경우에 한해서 도입하자는 그 취지에 정말 맞지 않고, 아주 광범위하게 대상이 넓혀져서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수급 관련 분쟁 중 시청자 이익 침해, 시청자 이익 침해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이고, 보편적 시청권, 매우 제한적인 명시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우려가 있는 분쟁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 저는 이것은, 방송사도 상당 부분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 기능에 대한 규제는 법정주의를 취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방송송출용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관련 분쟁도 직권조정이나 방송유지·재개 명령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재정제도 대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재정 대상을 최소화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재정제도 부분에 관한 의견이고, 그다음에 재정제도를 두기는 두되 재정 대상에 관해서 대폭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는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해서 할 경우에는 재정제도 도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넓게 광범위하게 규제의 폭을 넓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를 들어서 보편적 시청권 말씀하신 것은 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관심행사 등, 국민관심행사라면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로서 저희가 고시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월드컵, 올림픽에 한정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행사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해서 최소한의 재정제도를 두고, 이 재정제도를 도입하면 적용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역시 시행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하나 마련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하나 새로이 만든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재정은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도 저는 좀 더 재정제도의 독소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가치를 놓고 볼 때 정말 우려되는 그런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고도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의 3대 핵심과제가 첫 번째 방송법 제91조제2항에 직권조정 제도 도입, 두 번째 제91조의3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도입, 세 번째 제91조의2 재정제도 도입,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제도 하나하나가 언론사인 방송사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규제적인 장치로 느껴지고,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방송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통위가 이런 강력한 규제수단을 입법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앞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서너 차례 지상파와 위성 그리고 지상파와 케이블 간에 송출중단 사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시청자들의 불권리가, 시청권리가 훼손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가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상파 시청 불가로 인해 시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또 언론들의 비판이 방통위로 집중이 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방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게 된 데 대해서는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잉 입법으로 인해 정부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권력이라는 이야기지요. 미국의 FCC나 영국의 Ofcom, 프랑스 CSA 등 우리와 유사한 이 방송 관련기구들은 우리와는 달리 독립된 규제기구입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와 검열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신문과 함께 언론을 구성하는 양대 축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말합니다. 물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서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일 행정기관이 언론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제21조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언론은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그런 점검장치입니다. 공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가 중앙행정기구인데 공권력 있는 이런 방통위가 그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에 대해서 압력수단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입법이라는 합법적인 장치를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사전에 제한을 가하려는 사전검열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방송을 관장하는 규제기구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존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방송에 대한 규제법령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3가지 핵심적인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권조정제도 도입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정제도는 이해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직권조정제도가 도입이 되면 방통위가 강제로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정해 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조정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의 도입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죄송합니다만 그 조정의 결과는, 조정은 양쪽이 다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의 도입입니다. 방송사업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

의 유지·재개를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성격이 아주 강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제도의 도입입니다. 재정제도는 방송사업자들 간의 이해가 엇갈릴 경우에 그 이해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우리 방통위가 그 값을 정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권위는 사실상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 방송의 당사자가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 명령권, 재정제도 하나하나가 모두 방송사들에게는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하는 법적장치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송사의 지나친 자유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누군가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만약에 그 주체가 정부라고 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허가, 재허가권, 즉 생활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권력이 언론사인 방송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행정 권력이 언론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검열과 같은 강력한 규제권한을 사전적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부에 의한, 즉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가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방송국에 대한 규제는 행정부가 아닌 독립규제기관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산상황, 이해관계 문제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선진국 중에 단 하나의 예외국가인 일본입니다. 일본은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정부기관인 총무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성에서도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재정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케이블방송이 수신 장애지역에 대해서 지상파를 재전송하고 싶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지상파 측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재전송 요구를 하기 위해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정책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일본의 재정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지금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간단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권력인 방통위가 언론사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관관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김이 언론사의 영향력 또는 압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관관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통위가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량권이 행정권력이 언론사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칼자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구사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로서 방통위에게 주어진 임무는 국민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양 방송사들 간의 이해관계 내용에 대해서 판단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 방통위가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만 도입을 해도 사실상 충분합니다.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권은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방송사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30일 동안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국민들은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대회 자체를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계산은 양 당사자들 간에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우리 행정권력인 방통위가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부가 언론사에 대해서 재량권을 확보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용인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또 다른 절대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청권 보장 문제는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만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행정권력인 우리가 방송사에 대해서 어떤 재량권으로써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재정제도는 과욕이고 저는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권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 재송신 문제로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 간의 갈등이 첨예화됐을 때 미래부와 방통위의 합의된 공문 1장으로, 지상파 측에 공문을 보내서 지상파 측으로부터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됐습니다. 양 당사자들 간의 재전송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청권도 보장이 됐고 재산권 다툼은 법원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도입함으로써 지난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공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재정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또 다른 권력의 칼자루를 쥐는 그런 독소조항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부위원장님 의견을 정리하면 재정제도는 반대를 하시는 것이고요.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직권조정과 방송 유지·재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 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충분히 국민적인 보편적 시청권 보장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산상의 문제는 우리 행정권력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이 안에 대해 먼저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무래도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지상파 채널 재전송 협상이나 월드컵·올림픽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협상 결렬에 따라 방송송출이 중단되고, 국민들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들간 회의를 통해서 분쟁제도를 보다 구체화해서 시청권 보호와 시장 자율성 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 시청권 보호와 시장 자율성 보장이라는 2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시청권 보호를 명분으로 직권조정제도 강화, 재정제도 도입, 방송프로그램 유지·재개 명령권 도입 등 사업자들의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시장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한꺼번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정제도나 방송프로그램 유지·재개 명령권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에 나와 있다시피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의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을 유지·재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명령 불이행 시 방송사업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등 그 제재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4건 정도의 방송 송출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6일, 두 번째 경우는 49일, 세 번째는 8일 그리고 네 번째는 28시간 이렇게 공급이 중단되거나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재개 명령권만 도입을 해도 이러한 분쟁을 상당히 조정할 수 있고, 또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재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송분쟁조정제도에 더해서 직권조정제도와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이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이들 제도를 운영해 본 다음에 재정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꼭 재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 행사의 송출과 관련된 분쟁으로 한정해서 도입하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과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최소안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앞서 의견을 말씀하신 세 분 위원님과 제 의견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간추려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지만 혹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위원장님이 좀...

○ 최성준 위원장

- 예,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재정제도 개념에 대해 저희가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으면서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재정제도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인식을 과연 공유하고 있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에 반한다, 정부의 조정 통제수단이다, 사전 검열이다,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재정제도 도입과 이러한 이슈들과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의 위상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에는 제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규제위원회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방통위의 그간의 연혁을 보면 그래도 오늘날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 드려 봅니다. 사무처에서 아까 처음에 보고를 했지만 시청권 위협을 초래한다, 또 사업자 간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자율적 협상이 어렵다, 또 법원의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오랜 시간, 코스트(cost)가 든다, 이런 것들은 행정법에서 조정이나 재정제도나 이런 도입이 국내·외적으로 트렌드처럼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다 논리적으로 백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자 간의 분쟁이 국민생활이나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이상 사업자 간 자유로운 협상에 맡기기에는 곤란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방통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차 내지는 제도가 재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제도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 드리겠지만 이것이 정부나 행정기구나 정부 권력이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재정절차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자율적인 협상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면서 분쟁을 겪고 있는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 내지는 협상이 완료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인 것이지요. 어쨌든 소위 말해서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는 보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여러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한 형태이고, 이것은 당사자들 간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것을 사전에 정해 놓고 하는 절차가 당연히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가 되고, 또 중간에 언제든지 법원의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방송법에서 여러 가지 사전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제한이다, 허가다 이러한 것들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언론으로서의 방송사에 대한 검열이나 통제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로서 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규제라고 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온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나 직권조정중 둘 다 아니면 둘 중의 하나만 해도 과거

의 분쟁사례를 봤을 때 시청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데 저는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직권조정이든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든 이것은 재정제도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 달간 한시적으로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내려서 방송이 된다고 해서 그 기간 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 때의 대안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재정제도 도입 없는 직권조정이나 방송 유지·재개 명령은 의미가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한 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아까 사무처에서 설명도 하셨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직접 관계당사자인 지상파들로부터 의견수렴도 끊임없이 해 왔고,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많이 논의한 결과 오늘 보고한 이런 수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4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입법예고안과 달리 아무리 재정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시청자의 이익이나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을 때에는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앞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재정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개위의 심사결과로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직권조정을 하더라도 재정 회부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제가 보기에 이 큰 4가지가 수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재정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는 것과 이 수정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방통위가 재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제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내지는 단서 조항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정안을 방통위가 만들어서 분쟁사업자들에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방송법상 금지행위제도가 있습니다. 제82조의2제1항제1호를 보면 혹시 방송정책국장님, 제1항제1호에 관해서 그동안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에서 조사 내지는 제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조항을 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방송법상의 금지행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재하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에 보면 제1항제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 중단, 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저는 그 전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 중단, 제한하는 행위가, 과거의 4가지 사례가 저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지행위제도는 어느 특정 방송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조사방법이 법에 부여된 것이 있긴 하지만 조정, 재정 이런 어떠한 제도보다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아주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금지행위제도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자들 간의 자율적인 조정,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재정제도가 도입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당초

입법예고한 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조차도 수정안을 보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수정안이 다른 분야의 재정제도와 달리 사업자들 간의 자율협상을 굉장히 유도하고 존중하는 그런 규정들이 다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세 부분과 그다음 재산상황공표 제도 개선,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문 이동 등 부수적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텐데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앞부분의 세 부분 중에서 직권조정과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찬성하시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재정에 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재정보도 전면적인 것에 대해 반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수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찬성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재홍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께서 재정보도의 대상을 더욱 축소해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 한해서 재정보도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의견을 확인하기 전에 저도 종전에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정보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보도도 제2기 위원회에서 2013년 9월에 이와 같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변경되었지만 우선 그런 정책의 일관성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주로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독소조항,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사전 검열이다 등등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재정보도는 방송을 하는 것, 방송을 어떻게 구성하고 편성해서 내용을 만드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그 경제적인 대가를 어떻게 하느냐, 산정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다시 말하면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송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경제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본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다른 여러 가지 규제, 예를 들자면 광고 같은 규제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의 재원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것과 저는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방송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송분야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재정 과정에 대해서 쪽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시청자의 이익이나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정을 안 하기로 하고, 또 그것이 조정에 적합한 사건이면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재정을 하더라도 일단 그에 앞서서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쌍방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쪽 당사자든지 이 재정보도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정이 신청되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재정절차는 중지되고 소송에 의해 분

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재정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로서는 그 재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하는 결과를, 재정 결정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재정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60일 내 소를 제기하면 그 재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 단계별로 각 당사자의 충분한 이익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제도는 방송에 적용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재정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건축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건축 관계의 분쟁에 대해 건축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또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 등에 대해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전기통신 역무 제공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 역시 또 재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가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역시 재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재정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시간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대신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쌍방을 대심구조를 갖추어서 준수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분쟁방안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는 재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기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재정제도를 됨으로 인해 바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이 매일 접하는 서비스인 방송과 관련된 신속한 분쟁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 이 재정제도에 관해 서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매스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뉴미디어 정책, 법제, 사회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답변을 보면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이 56%, 반대하시는 분은 25%입니다. 찬성하신 이유는 바로 당연히 국민이 매일 접하는 서비스인 만큼 분쟁해결을 통한 시청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이유는, 첫 번째 반대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자의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충분히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전문가들 의견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나 국회에서의 상황을 보면 모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이에 재전송 분쟁이 생겼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빨리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시청권이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으로서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은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방금 환경, 건축, 전기통신 역무 이런 부분에 대해 재정제도가 지금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하

셨는데, 정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라는 그 가치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재정 문제를 놓고서 환경, 건축, 전기통신 역무에서 재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방송에도 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저로서는 아주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청권 보장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사업자들 간 서로 재산권을 놓고 벌어지는 그 분쟁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 문제까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방송사는 지상파일 수 있고, 종편일 수도 있고, 또 케이블일 수도 있고 그 방송 문제가 되는 당사자들 어느 쪽이든 간에... 제가 재량권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대가산정이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다들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가산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가의 값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재량권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그 재량권에 의해 그 당사자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 권력이 혹시라도 언론사인 방송사에 그런 이익적인 부분을 가지고 압박을 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우라고 생각을 하신다니...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측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측인지 두고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자유 가치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뼈 속까지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권력이 방송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자꾸 많이 가지고 싶어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재산권분쟁에 관해서는 당연히 법원에 가서 해결이 될 것이고 또 현재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중간에, 행정권이 이 문제를 재단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 저의와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언론의 자유에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설문조사라는 것, 저도 이 과정에서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 응답의 수치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 그 부분은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여론조사를 많이 해 봤던 사람으로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재정제도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정말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런 독소적인 조항을 입법하는 자리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퇴장을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직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퇴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위원장님께서 재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시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각자 의견을 이야기해서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대충 그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더 있어서 이야기를 해도 서로가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요.

○ 최성준 위원장

-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지금 중간에 다른 안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다른 문제는 몰라도, 방송인 출신으로서 정말 정부가 방송에 대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제도, 우리가 2가지 제도만 도입해도 국민의 시청권은 얼마든지 보장이 됩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확보해 주면 방통위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재정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언론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봅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이기주 위원님께서서는 그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감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우려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법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저 부분은, 아까 재량권을 자꾸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원에 소송으로 가면 재전송료를 결정하기 위한 쌍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 주겠지요. 그것은 재량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원의 역할인데요. 우리 행정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 말고도 방송사와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일들이 많은데 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방송사는 항상 그런 문제에 관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저는 제도의 채택여부를 떠나서 법원에서의 판단은 각종 자료를 보고서 어떤 적절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자료를 보고 산정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저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하더라도 소송에 나올 것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대심적인 구조 하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법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재정도 적절히 봐서 말만 듣고 재량을 발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방송의 자유, 독립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방송은 신문과는 언론의 자유, 언론의 기능 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자율 규제 말고는 아무것도, 더군다나 정부기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허가해주고 재허가하고 재승인합니다. 그것은 자유뿐만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사회적 책무, 공공성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정책규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끈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직도 지상파방송사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것이 횡포로 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규제장치, 최소한의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재정 대상을 국민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에서 보편적 시청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그것은 정부가, 우리가 재정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안을 보면 이것은 아주 넓어졌고 이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재정 대상으로 수정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하고..., 이것은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원래 안에서 입법예고와 규제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된 이 안에 대해서 분쟁과 관련된 직권조정과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모두 다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금 재정에 대한 이 안에 대해서는 이기주 위원님과 저는 찬성하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세 분은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면 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원안에 대해서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보고안에 대해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 안은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보고안대로 저희가 의결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홍 위원님이나 또는 고삼석 위원님께서, 재정제도를 두되 그 대상을 국민관심행사 등으로 한정해서 두는 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위원장님,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제도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고 이 사안이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상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상이 지상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방송사, 그 당사자들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권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재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은 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방통위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송사들로 하여금 정부가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보편적 시청권, 국민들이 시청을 할 수 있는 그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방송사에 대해 서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우리가 판관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행정기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세계 최초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시겠다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허원제 부위원장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계속 논의를 진행해 보지요. 부위원장님께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자 입장에서 재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위원장님의 경우 언론인 출신으로서 재정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깊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렸듯이 시청권 보호와 시장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 2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으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서 재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조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또한 직권조정이나 다른 제도와 달리 이 재정제도는 저희 위원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들 다수가 원안을 반대한다면 그 원안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직권조정이나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이 도입되기 때문에 우선 그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해 보고, 재정제도의 경우에는 국민관심행사에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래 기본적인 의견은 충분히 아는데 그 기본적인 의견은 지금 다수에 의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과거에 조정과 중재 실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 실무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삼석 위원님 내지는 김재홍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그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현재 보고된 수정안이 저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정책기구, 규제 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업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 물론 저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들과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설문조사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회의자료 <붙임 2>를 보시면 방송분쟁해결제도 개선의 두 번째, 재정제도 도입을 보면 지상파방송사는 반대, 유료방송사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한 번 보시지요. 반대를 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의 이유를 보면, 사적 자치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과 절차가 중복되며 무익한 소송을 강제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SO와 IPTV는 부분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통위 분쟁해결 기능 강화 필요성은 있으나 시장 자율성 보장을 위해 조정과 유지·재개명령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읽어보면서 이것이 과연 재정제도에 대해 부분 찬성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방통위에 접수된 의견입니다. SO와 IPTV 같은 경우 최근에는 다시 입장을 선회해서 재정제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 중에 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오늘 사무처에서 위원회에 상정한 안에 대한 찬반의견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저는 수정안이 불가피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정안 조문을 한 번 읽어보시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이 방통위가 무엇을 얼마만큼 재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재정 자체가 저희가 직접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재정안을 저희가 그마저도 먼저 제시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계속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위원님들과 또 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연히 이 재정제도가 인정이 되었을 때 충분히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재정제도를 김재홍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먼저 도입해서 적절한 때 저희가 그런 재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아, 재정절차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가 이렇게 돼서 이런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은 이렇구나'라는 것이 잘 알려진다면 그 이후에 재정의 범위를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러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이와 같은 논의만 반복하다가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원래 제가 말씀 드렸던 것에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절충을 해서 두 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국민관심행사에 한정해서 재정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다수 위원님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제 의견을 하나만 더 붙인다면 방송정책국에서 해야 할 일이 금지행위제도의 운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 중단, 제한하는 행위는, 신고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결국에는 시청권을 제한하게 되고 공정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더불어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금지행위의 그 부분에 조정이나 이런 대상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금지행위는 사후적으로 조사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의 시청권 보호에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제도나 직권조정이나 유지·재개 명령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의 시청권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조정이나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나 재정이나 금지행위제도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서 도입되고 적용되어야 우리와 같은 이런 규제기관이 사후규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쟁규제가 됐든 경제적 규제가 됐든 그것은 방송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프로그램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정제도가 도입이 되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미흡한 것이 많지만 보다 완결적인 사후규제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저와는 의견을 달리 하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정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지행위제도와 재정제도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금지행위제도라도 우리가 적극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재정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하는 안을 정리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저희들이 혹시 싶어서 실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실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읽는 것보다 배포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수정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방송사업자 중에서 만일 국민관심행사로 축소한다면 기존에 있던 음악유선방송사나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방송사업자는 대상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그래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6조제2항의 국민관심행사에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수급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범위가 좁혀진다면 제2항에 나와 있던 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시청자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이 제91조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수정안에서 재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정대상으로 올린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아닙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개정안에 보면 저희들이 열거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1항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한 것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민관심행사는 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1항에서 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판단의 여지없이 거의 다 재정이 들어오면 일단 진행을 해야 할 사항 같아서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다든지 여부를 판단할 그런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굳이 둘 필요 없고 다만 조정으로 저희들이 회부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는 것으로 해도 적절치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국민관심행사가 그 대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제76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무엇 무엇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여기에 따라서 방통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고시한 것이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축구에이매치,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경기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전부 다 스포츠행사만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이 아시안게임과 또 축구….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에이매치….

○ 김재홍 상임위원

- 국내 에이매치….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것은 국가 대표급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방통위원회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고시는 만일에 필요가 있다면 좀 더 넓힐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좁혀야겠는데요. 국민관심행사로만 법에는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한 고시는 아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말씀 드린 대로….

○ 김재홍 상임위원

- 축구 에이매치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기는 그렇긴 한데….

○ 최성준 위원장

- 물어보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에서 '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송법 제76조제2항….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제76조제2항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 등)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따왔는데 그때 말하는 국민관심행사 등을 그대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등은 또 다른….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아닙니다.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등'은 여기에 있는 국민관심행사 등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등'이 후자가 됐으면 하는데….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제76조제2항이라고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관심행사 등으로 한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에 아시안게임과 축구에이매치가 들어가는 것이….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이하 국민관심사항 등)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아시안게임과 축구에이매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거기에 재정을 거는 것인데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과 축구에이매치까지…, 월드컵과 올림픽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2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그것이 만일 국민관심행사가 아니라면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우려들을 고려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그 정도의 재정 대상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이기주 위원께서는 원안은 원래 개정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원래 수정안....

○ 최성준 위원장

- 수정안이라는 것이 헛갈리는데....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안건으로 보고한 안....

○ 최성준 위원장

- 안건에 나와 있는 이 안에 대해 찬성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아마 반대는 하지 않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주 위원님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세 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재정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배부되어 있는 수정안대로, 그다음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원래 보고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씨앤앰의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109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130일 이상 노숙 및 거리 농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운 날씨 속에 노동자 두 분이 높이 20m의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분들은 109명의 해고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3월 정부조직법과 방송법 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사업자의 허가권자가 미래부로 변경되었지만 뉴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방통위의 사전 동의 의결 및 미래부 통보가 있어야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제 심사 시 우리 위원회는 방송 법령상 허가, 재허가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지역적·사회적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금 씨앤앰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보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 및 대주주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지역적·사회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이행 등 씨앤앰의 방송사업 재허가조건 이행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미래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와 맥쿼리에 대해서는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은 물론 국회,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염려를 고려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신 취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5분 폐회 】